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4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 '박준현방지법' 제정 촉구

01

"학폭 사과 거부, 오만함 규탄" 체육시민연대, '박준현방지법' 제정 촉구...

더게이트 배지헌 기자

02

‘무죄 추정’ 택한 키움...박준현 캠프 데려간다

전남일보·연합뉴스

03

방범용 아닌 감시용?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장 ‘사무실 홈캠’ 논란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04

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명과 공익 법무 실습 진행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05

문체부, 프로스포츠 단체와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뉴스1 이상철 기자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이행, 2026 한국프로야구 신인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괴물투수 박준현의 오만함을 규탄하며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나온지 오늘로 70일이 다되어 갑니다. 피해자들은 학교는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지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지난 해 말 가해자에게 사과에 앞서 만나자고 용기내어 제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먼저 내민 손길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숨어버린 가해자를 화해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보듬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요하고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삶이 파괴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무력화시킨 가해자 박준현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박준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적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부끄럽고 초라한 도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 결정). 박준현의 사과 거부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해학생들의 보호, 교우관계 및 학교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공익을 저버린 것이고, 이를 외면한 박준현의 행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1순위 지명으로 받았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의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무관용 원칙을 담은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1곳이 학폭 가해 전력을 이유로 감점한 수험생은 총 151명이었고 이 중 150명(99%)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력만 있다면 과거의 죄가 덮여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키움 히어로즈에게 묻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존재 이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폭 가해자인 지명 선수가 명백히 인정되는 과오에 대한 사과조치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이를 묵인하고 영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구단 스스로 ESG 경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만 전지훈련 기간 동안 속고해 보길 바랍니다. 팬들은 학폭 영웅을 키우는 구단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KBO에게 요청합니다. 「KBO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00만 관중 돌파라는 프로야구 흥행의 역사 한가운데서 KBO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당부드립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대표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정면도전하는 자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 박준현의 부친 삼성 라이온즈 박석민 코치에게 엄중히 고합니다. 삼성 왕조를 이끌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인으로서 자녀의 과오를 훈육하고 사과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 9. 17. 아들의 1순위 지명 당시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후 박준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프로야구 전체 1순위 괴물투수는 우리 사회가 키워왔음을 통렬히 자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아직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지도자 등을 포함한 학교 당국의 피해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거수투표 방식 그리고 1호 서면사과처분 미이행, 대학입시 이외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절실합니다. “박준현방지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준현 선수에게 전합니다. 피해자가 당신에게 정중히 요청한 사과는 당신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묻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저버린 그 화해의 손길은 친구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27.

국회의원 손솔,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

"학폭 사과 거부, 오만함 규탄" 체육시민연대, '박준현방지법' 제정 촉구...27일 국회서 기자회견

더게이트 배지현 기자

2026.01.25.17:34

사진=키움

체육시민연대가 2026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박준현의 학교폭력 서면 사과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체육시민연대는 27일 오후 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박준현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손솔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체육시민연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한국 스포츠계의 그릇된 관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체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70일이 다 되어 간다"며 "집요하고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삶이 파괴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무력화시킨 가해자 박준현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자 박준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과를 거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적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부끄럽고 초라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서면사과 조치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며 "박준현의 사과 거부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학교폭력이라는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야구 실력만 있으면 모두가 나서 지켜주는 한국 스포츠계의 그릇된 관행을 규탄한다'며 관계 기관 모두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사건은 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천안북일고등학교,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주변 어른 모두가 사건 해결을 미루는 사이 벌어진 틈으로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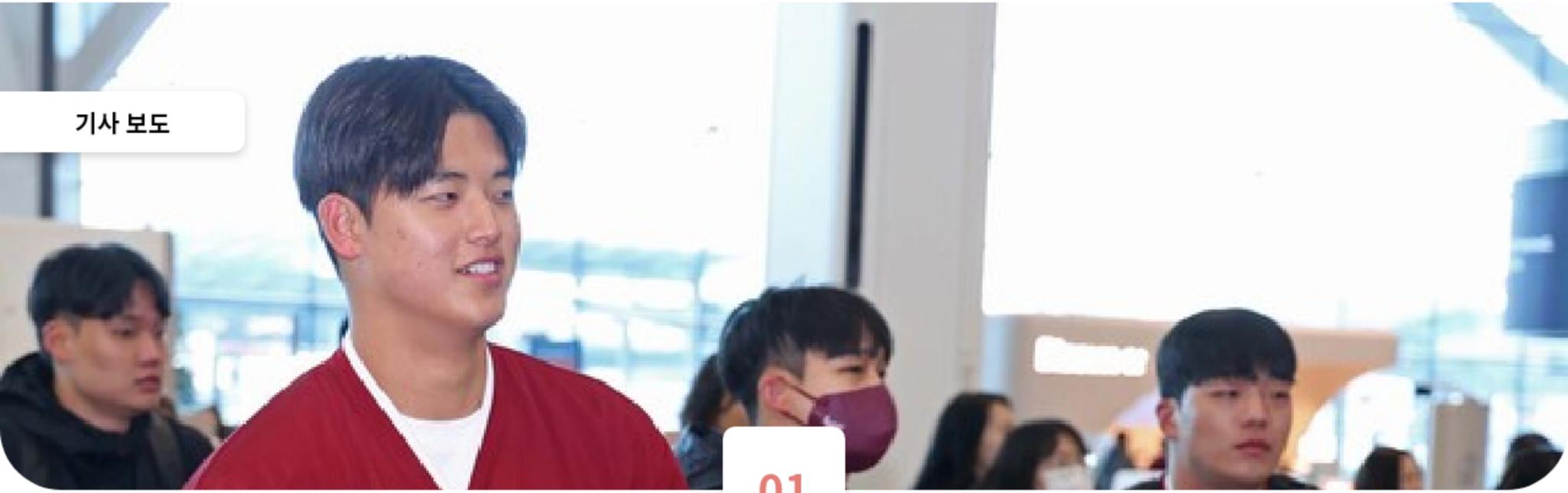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는 "팬들의 사랑을 존재 이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학폭 가해자인 지명 선수가 명백히 인정되는 과오에 대한 사과조치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키움이 이를 묵인하고 영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구단 스스로 ESG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BO에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1200만 관중 돌파라는 프로야구 흥행의 역사 한가운데서 KBO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력만 있다면 과거의 죄가 덮여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이후 박준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아직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 지도자 등을 포함한 학교 당국의 피해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조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거수투표 방식 그리고 1호 서면사과처분 미이행, 대학입시 이외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며 "'박준현방지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

박준현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사과를 거부하고 기한 내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키움과 KBO는 아마추어 시절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소송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야구를 그만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아무 문제 없이 프로 무대 합류 수순을 밟으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02

‘무죄 추정’ 택한 키움…박준현 캠프 데려간다

전남일보·연합뉴스

2026.01.23.17:53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학교 폭력(학폭) 관련 진실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신인 투수 박준현(18)을 스프링캠프에 동행시키기로 했다.

박준현을 포함한 키움 선수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구단 1차 동계 훈련지인 대만으로 출국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 지명을 받은 천안북일고 출신 박준현은 최고 시속 157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유망주로 평가받는다.

박준현과 같은 학년인 A 학생 측은 지난해 5월 박준현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준현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박준현은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얻었고,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서면 사과)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호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지만, 학교 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준현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8일까지였던 서면 사과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다.



02

서면 사과가 이뤄졌다면 낮은 징계 수위를 고려해 프로 선수 활동 자체에는 큰 제약이 없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서면으로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준현 측은 학폭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낙인이 찍힌 상태로 프로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소송을 통해서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단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박준현은 학폭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행정심판과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프로 무대에 서야 한다.

키움 구단이 박준현을 스프링캠프에 포함한 배경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프로 입단 이전인 고교 시절에 발생한 일이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시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캠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단 차원의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키움은 이번 대만 전지훈련에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신인 선수를 포함시켰다. 다른 구단들이 통상 1~2명의 신인을 동행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이는 신인 선수들을 조기에 점검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1번 지명 선수인 박준현만 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02

다만 구단 결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행정 심판을 통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캠프 동행을 결정한 것이 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전지훈련 참가를 허용한 판단이 향후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움은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안은 채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방법용 아닌 감시용?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장 ‘사무실 홈캠’ 논란

일요신문 이동섭 기자

2026.01.22.11:22:17

사진=제보자

| 고소한 직원 정직 2개월 징계 후 홈캠 사라져…사무처장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얽혀

최근 ‘아빠찬스’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대한체조협회가 이번엔 사무처장 A 씨를 둘러싼 논란으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A 씨는 2025년 9월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 씨가 사무실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한 것이 사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 B 씨는 “A 씨가 홈캠 각도를 직원 업무공간으로 돌리는 등 직원 감시가 의심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 후 대한체조협회가 B 씨를 상대로 인사보복에 나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장 사무실에 홈캠이 설치된 건 2023년 12월경이다. 대한체조협회 사무실이 올림픽회관으로 이전한 뒤 일이었다. A 씨는 방법 차원에서 홈캠을 설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사무처장 사무실만 촬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직원들과 합의 후 홈캠을 설치했다.

B 씨는 1월 20일 일요신문 통화에서 “홈캠이 상습적으로 묵시적 동의 범위를 넘어 직원 업무 공간을 비쳤다”면서 “감시와 통제”라고 했다. 그는 “A 씨는 직무공간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설치된 건 원격감시 및 녹음 기능까지 있는 홈캠이었다”고 했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무단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행위이며, 근로자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음성이 들어가는 홈캠은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CCTV보다 더 무거운 관리책임이 부여되지만, 사무처장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홈캠을 조작해 직원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평소에는 홈캠이 사무처장 사무실만 비추다가도, A 씨가 장기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홈캠 각도가 직원 업무 공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혼자 주말 근무를 하던 날에도 홈캠이 각도를 돌려 직원 업무공간으로 향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A 씨가 사무실에 설치했던 홈캠 사양설명서에 따르면, 이 홈캠은 실시간 음성 청취가 가능하며 촬영 각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스포츠 종목단체 관계자는 “방법을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체조협회를 비롯한 대부분 종목단체 사무실은 올림픽회관에 있는데, 올림픽회관은 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외부인이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 “홈캠까지 설치하며 방법을 신경 쓰기엔 치안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라고 했다.

A 씨는 피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에 홈캠을 비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1월 16일경 돌연 홈캠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대한체조협회가 B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시기였다.

취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대한체조협회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신고인과 피해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인 전직 체조협회 직원이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는 B 씨였다.

2025년 10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조협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에 이미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A 씨 감봉 징계가 끝난 뒤인 2026년 1월 대한체조협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B 씨는 국제대회 숙박일정 관리 소홀, 후원사 소통 및 협업 관리 미흡, 기금 정산 업무 지연, 국제 지도자 교육 기회 관리 소홀, 국제대회 대표단 물품 관리·전달 소홀, 회계업무 관련 보고·응답 의무 위반, 국가대표 출장계획서 내부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의혹 등 사유로 1월 14일 징계심의를 받았다.

대한체조협회는 1월 16일 B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이번 징계가 인사보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난 날, 사무처장 A 씨가 사무실에 놔둔 홈캠을 치웠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은 1월 21일과 22일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장 A 씨에게 사무실 홈캠 설치 경위 및 목적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04

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명과 공익 법무 실습 진행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2026. 1. 23.23:03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관해 "올해 처음 진행한 이번 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대해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프로스포츠 단체와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뉴스1 이상철 기자

2026.01.21.16:13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스포츠 단체가 프로스포츠 산업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21일 서울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상훈 총재,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부총재, 한국농구연맹(KBL) 신해용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KOVO) 신무철 사무총장,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이준우 사무처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김순희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프로스포츠는 지난해 관중 1700만 명을 넘어서고, 매출 확대 등 성과를 내며 국민 여가 문화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200만 명 관중을 돌파하며 뜨거운 흥행 열기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기반 시설 개선, 암표 근절 필요성 등 현안 해결 방안, 프로스포츠산업 발전 과제, 대형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건립,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현 차관은 "프로스포츠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가문화이자 지역경제와 관광,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체부도 프로스포츠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